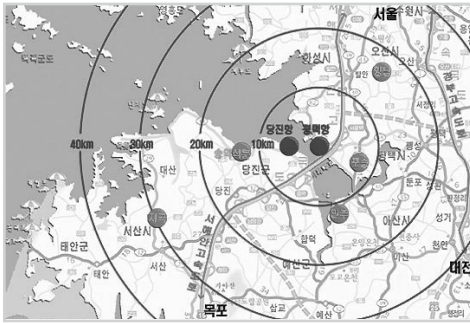


## ■ 당진~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 재정경제부,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전북 새만금 3곳 추가지정 -



충남도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2월 21일 확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에 이어 21일 충남도에 또 하나 낭보가 들어왔다. 바로 충남도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충남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 경북, 전북 새만금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 충남과 경기도 잇는 6814만㎡에 7조원 투입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규모는 충남도에서 당진의 석문지구와 아산의 인주지구, 서산의 지곡지구 등 3개 지구 4190만㎡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와 화성 향남지구 등 2624만㎡를 포함해 총 6814만㎡다.

이 중 5006만 $m^2$ 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국비 475억원과 지방비 4139억원, 민자 6조 5382억원 등 6조 999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개발된다.

5개 지구별 개발 컨셉은 당진 송악·석문지구는 (송악)상업·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 (석문)친수공간의 생태도시 ▲아산 인주지구는 레저·휴양의 관광 및 자족도시 ▲서산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의 산업도시 ▲평택 포승지구는 첨단산업, 국제물류·업무, 주거복합도시 ▲화성 향남지구는 BT산업 글로벌 메카 등이다.

이에 대한 차별화 요소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적지로 개발(R&D, 물류, 입지경쟁력 강화) ▲외국인 정주환경(교육, 주거, 의료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 ▲동북아 부가가치물류 기능의 강화(수입 중국부품 + 국내첨단부품의 조립가공 → 수출기지화) ▲국제적 수준의 R&D기능 확충과 첨단생산 기지화를 통해 국가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이다.

### 고품격 주택단지 및 다양한 교육, 의료, 관광 레저 시설 마련



또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이 물류(항공, 항만)와 국제금융비즈니스 기능 중심인 데 반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생산 기능을 특화시켜 기존 구역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시설과 교육의료시설, 관광 레저시설도 마련된다. 주거 시설로는 각 지구별로 장단기 체류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거 시설 및 자연 친화형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악단지는 업무주거형 주택 및 자연 지형을 활용한 저층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석문단지는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중저층의 블록형 주택과 별장형 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주 지구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과 수변공원 주변의 저층 저밀의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형태의 업무주거형 주택이 공존하도록 조성한다.

교육과 의료시설로는 외국인 주거단지와 연계해 초중고교가 복합된 외국인 학교를 송악과 석문, 인주 등 4곳에 설치하고 송악단지에 외국인 종합병원과 석문 지구에 전문 병원이 설치된다. 관광 시설로는 인주지구에 샵오토 및 기존 유원지와 연계해 18홀 골프장을 건설해 인근 태안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108홀 골프장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관리 등에 대해 충남과 경기 양 지역간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충남지역 균형 발전 기대...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인프라 조성 및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파급효과로 전국적인 생산유발액은 총 54조 4330억원에 달하며 부가가치 유발액 18조 5810억원, 고용유발 효과 총 33만 5756명 등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남지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유발액은 총 13조 328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3조 9420억원, 고용 창출효과도 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했다.

충남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 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국방대 논산 유치와 함께 균형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외자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 글은 디트뉴스24(2007년 12월 21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 맨손의 자원봉사자 50만명… 태안, 기적을 만든다
- 해상사고로 원유 1만2,000여톤 유출 ‘검은 재앙’
- 봉사자 계속 몰려… 외국인들 “한국 놀라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및 방제 일지

12월7일 오전 7시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정박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원유 유출 시작

오후 8시 기름띠 태안반도 해안 습격

8일 정부, 재난사태 선포

9일 오전7시30분 유조선 원유 유출 중단, 총 1만900톤(1만2,547kℓ) 유출

11일 정부, 태안 등 6개 시·군 특별 재난지역 선포

16일 방제 자원봉사자 10만명 돌파

22일 방제 자원봉사자 30만명 돌파

24일 해경, 크레인선과 예인선 선장 등 2명 구속, 유조선 선장 계속 수사중

26일 방제 자원봉사자 40만명 돌파, 성금 110억원 돌파

29일 방제 자원봉사자 50만명 돌파 예상

12월 7일 이른 아침 충남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1만2,000여톤이 넘는 검은 기름은 순식간에 태안 해변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백사장이 시커멓게 변했고, 양식장의 굴과 전복은 모두 폐사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던 태안 주민들은 절망했다.

그러나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뀌었다. 매일 수만명씩 전국에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기름띠를 빠르게 걷어내며 태안의 속살을 되찾고 있다. 방제 작업 지원을 위해 온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국민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손길이 태안의 해안을 닦고 또 닦았다. 버스 안에서 기말고사를 보면서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온 대학생들도 있었다. 성탄절에도 방제복 차림의 인간띠는 이어졌고, 송년회 대신 태안으로 달려온 기업과 단체들도 많았다.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태안 자원봉사자는 사고 열흘만인 16일 연인원 10만 명을 돌파한 뒤 3,4일 간격으로 10만 명씩 증가, 보름 만인 22일 3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연말까지 50만명을 돌파할 것이고, 방제작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원봉사의 손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기름유출사고 직후 (위)  
피해복구 후 (아래)

방제 자원봉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1997년 일본 후쿠이(福井)현 미쿠니(三國) 마을 앞바다 중유 유출 사고의 경우 석 달간 3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와 기름을 걷어냈다. 하지만 태안은 불과 보름 만에 30만 명 기록을 깼다.

태안반도가 사고 이전처럼 복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파도와 백사장은 제 색깔을 찾았고, 자취를 감췄던 고동과 게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청둥오리, 왜가리 등 철새도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다시 날아들기 시작했다.

‘태안의 기적’은 세계 기름방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그 주인공은 이름없는 자원봉사자들이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태안과 보령의 59개 섬은 이제서야 방제가 시작됐다. 특히 무인도는 아직도 기름 범벅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유다.

인재로 드러난 원유 유출 사고의 교훈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초동대응 실패, 방제능력 재점검 및 매뉴얼 정비, 유처리제 유해 논란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피해어민들의 피해배상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방제가 성공해 내년 여름 해수욕장들을 가득 채운 관광객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일했던 곳을 내년에 다시 찾아와 특별한 감회를 맛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 ▶ 자원봉사신청 (041) 670-2644~7

\*이 글은 한국일보(2007년 12월 28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뽄뽄 뭉친 열정 ‘승리’ 일궜다\*

- 민·관합동 정부설득... 불가 → 이진 끌어내  
923명 고용 효과·경제가치도 1371억 달해 -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방대 논산 이전 발표는 단순히 ‘기관이 옮겨간다’라는 명제를 뛰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해 충청도에는 각종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기업 본사가 등지를 틀었지만 기대감만 높았을 뿐 현재까지 지역과 동화되지 못한 채 하나의

‘섬’으로 표류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하지만, 국방대 논산 이전은 지역 민·관이 하나로 뽄뽄 뭉쳐 중앙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열정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국방대 이전은 2년 반 동안 행정도시와 논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 178개 기관 중 유일하게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국방대는 특히 천안, 아산,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천안, 아산은 정부가 인정한 성장지역으로 이미 명분을 잃었고 연기는 행정도시와 통합 논의 중이어서 부적절한 평가가 팽배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12월 12일자 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대는 논산 이전 불가 사유로 ▲교통 접근성 악화로 교육기능 차질 ▲1,100여 명에 이르는 외래교수 초빙 불가능 ▲학생수 감소 ▲해외 군사외교 인사 방문시 불편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완구 충남지사의 치밀함으로 민·관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근거와 논리를 꼼꼼히 찾아 균형발전위원장과 건교부 장관 등을 설득하는 한편, 이해가 부족하면 또다시 찾아가 보완 설명하는 등의 열정으로 마침내 국방대 논산이전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했다.

우선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되면 각 군(軍) 본부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등과 함께 국방산업단지(66만㎡)로 엮어 대전의 자운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를 클러스터화 할 수 있어 낙후된 충남 서남부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3군 사관학교까지 유치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대 논산이전 결정은 기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효과도 지대하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국방대 논산 이전 효과로 일단 지방세 12억 2,000만 원이 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또 923명의 고용효과와 87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92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게 된다.

논산시도 시유지 6만 6,000㎡를 무상 제공하며 진입도로 건설, 문화·체육 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에 2,000여억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백제문화제 ‘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만든다

—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 및 추진계획 보고회서 밝혀 —



충남도는 12월 5일 이완구 도지사 주재로 공주·부여 양 지역 시장·군수, 의장, 문화원장과 행사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백제문화제 집행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 및 제54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제53회 백제문화제 공식 후원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공주대학교 이찬희 교수의 평가보고에 이어 한찬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기획관리처장의 백제문화제 결산과 내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년 행사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찬희 공주대 교수는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73.5%가 매우 만족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그중 대 백제기마군단 퍼레이드와 백제향, 인절미 축제, 사비백제의 부활 등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년 백제문화제의 가시적 성과로는 관람객 126만 명(외국인 102천 명 포함)과 353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계획구상에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찬희 처장은 개최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간으로 늘려 추진할 계획이며, 주제도 ‘해상왕국 700년 대 백제’로 바꿔 관람객 15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존 프로그램인 ‘백제향’과 ‘대 백제 기마군단 퍼레이드’를 대폭 보완하여 추진하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대의 불꽃놀이 쇼 ▲700m 백제성 쌓기 ▲대 백제 사신 행렬과 한·중·일 무령왕 대제 ▲5악사와 B-boy 댄스공연 ▲차전놀이 등 전통놀이 시·군 경연을 추진하여 관람객에게 흥미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지사는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이한 행사로는 관람객에게 깊이 있는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면서, 내년 행사는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남들이 못하고 안 될 것 같은 행사를 찾아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보고된 행사 외에도 백제유물 되찾기 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백제문화제를 아시아 최고의 역사 문화축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충남도, 금강환경대상 수상

— 전국최초 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 —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금강환경 대상에 전국최초로 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과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물 통합관리에 힘써온 충청남도(수질관리과)가 선정됐다.

12월 4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강환경대상’을 받은 충청남도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물 관리업무를 전국최초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의 우수한 공적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다원화된 물 관리체계에 따라 농림수산물 4과, 복지환경국 2과, 건설교통국 1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3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물 관리업무를 지난 5월 3일 전국최초로 ‘물 통합관리본부’ 발족과 함께 물 통합관리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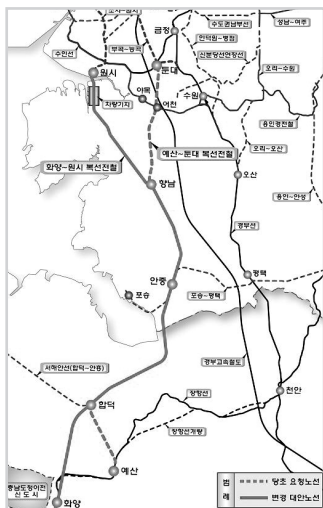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하천 등의 수질오염 특성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로 대안 제시 ▲각각 다른 부서 및 기관에서 관리하던 하천과 저수지 등의 수질

측정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3국 7과, 1연구원에서 개별 추진하던 물 관련 사업을 물 통합관리를 통해 4대 목표 42개 실천과제를 선정 ‘물 통합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물 통합관리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저수지 수질개선 시범연구사업 ▲물 관리 관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금강생태 탐사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상·하수도분야 국비확보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확정

— 총연장 90.18km 2017년 완공, 서해안 지역 발전 기폭제 —



충남도 홍성군 금마면 화양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를 잇는 연장 90.18km(사업비 28,304억원)의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가 내년 9월 착수, 2017년 준공 목표로 건설된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 말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건설계획인 예산↔야목의 경제성(B/C 0.65)이 낮게 산출됨에 따라 시·중점을 화양↔원시로 변경하여 가며 악전고투 끝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건설을 어렵게 얻어냈다.

시·중점을 변경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정에서 충청도가 서해안 개발시대와 도청신도시건설, 당진지역 철강 산업의 부각 등을 내세우면서 철도건설의 당위성을 주장, 사업의 착수를 이끌어 내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서해선 철도건설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익산에서 합류하여 장항선 홍성과 화양에서 분기, 이번 에 신설되는 서해선(화양↔원시)을 거쳐 원시와 소사를 경유, 경의선과 연결됨으로서 남북을 잇고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 중국엔 유럽과 연결까지도 예상된다.

낙후된 우리도의 서남, 서북부의 활성화와 신 도청 개발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충남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현재 기반복선·노선단선 개량사업이 한창인 장항선의 복선전철화를 앞당기고, KTX 운행과 수도권 전철의 신도청소재지까지 연장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충남도,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로드맵 최종 확정

— 향후 5년간 장애인복지발전에 4,350억원 투자 계획 마련 —

충남도는 11월 20일 이완구 도지사와 장애인단체장 및 기업인단체장,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지난 5일 연구용역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확정유보 하였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도는 이번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투자예산의 변경 확정(4,816억원→4,350억원), 비예산사업 적극 발굴 추진, 시·군과의 사업 계획 합의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5개년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5개 분야 66개 사업에 4,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분야 37개 사업에 3,948억원, ▲원활한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환경개선분야 9개 사업 129억원,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분야 10개 사업 193억원, ▲하나되는 통합교육 및 정보화 분야 6개 사업 44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 신장 4개 사업 35억원을 투자 하게 된다.

이를 재원별로는 ▲국비 1,387억원, ▲도비 1,941억원, ▲시·군비 1,022억원으로 국비가 31.9% 로서 국비의존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2,000가구와 사회복지 전문가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외부연구진,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함은 물론, 이번 결과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 복지발전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민선4기 3년차 조직개편 ‘틀’ 확정

- 純增 없이 자체조정으로 1과 3담당 신설, 10국 45과 193담당 -

충남도는 민선도정 3차년도 도정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했다.

금번 조직개편은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면서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정원 증원 없이 군살을 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필수 불가결한 복지,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보강하여 조직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기구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편한 것이 큰 특징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충족을 위한 노인장애인과 신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T/F팀 신설 ▲문화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시설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예술 분야 기능보강 ▲활력 있는 국제통상, 대외 농어업 (FTA대책) 분야 전문 인력 등을 중점 보강하여 ‘강한 충남’ 실현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이로써 충남도의 조직은 10국 44과 190담당에서 1과 3담당이 증설되는 10국 45과 193담당으로 늘어나지만 기존 정원으로 조정하였고, 정원도 3,337명으로 단한명의 인력증원이 없는 민선4기 3차년도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道에서는 입법예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08년 1월중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완전한 환경정화·피해배상 절실

- 경제적 가치산정, 가해자 명확한 책임구분 필요
- 전문 방제팀에 의한 체계적 생태복원 이뤄져야



12월 24일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관한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 및 생태·환경 조사, 방제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성수 변호사=씨프린스호 사건 당시 국제기금(IOPC Fund)에서는 어업피해보상에 있어 피해어업인 측에 대해선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선임한 서베이어의 의견(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상이 농후했다.

또 국제기금은 씨프린스호 사고 배상 당시 국제기금이 과학적 증거를 내세워 어민들의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선례를 고려해 이런 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과학적 증거 수집을 도와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는데 관련 자료는 영문 자료 외에 별로 없고, 적용 법규 역시 국내법과 국제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절실하다.

맨손어업 종사자 등과 같이 소득 증빙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어로소득 통계자료 등이 지원돼야 한다. 또 국내 관련 판례는 물론, 국제기금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청구를 해야 한다.

▲전승수 교수=초기방제 작업에 있어 물에 기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타르조각까지 생각해





야 한다. 연안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니 초기방재의 정의 뿐만 아니라 평가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뒤 논의해야 한다.

초기방재의 문제점과 교훈을 생각해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안선에 기름 찌꺼기가 물려있는 게 문제인데 자원봉사 활용시 메뉴얼에 따라 연안 특성에 맞춰 제거작업이 수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피해 범위 확산은 물론, 장기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초기방재시에 해안 암석 등에 고압수를 쓰는데 암석제거 때 온수의 온도에 따라 피해가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하며, 갯벌에 대한 폭넓은 규정 및 우리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전체 해안선에 대한 조사에서 세척 구간, 생물의 서식지 파괴 및 복원 범위 등 해안선 특성에 맞게 방재방법, 자원봉사 투입 등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주민과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한 신탁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류오염, 생태, 문화복원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장기적 손실파악 및 지역개발 계획, 지역공동체 복원체제, 생태계 복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오염 방재 메뉴얼 작성, 대형유회수선 확보 및 유조선 호송선 제도 시행, 유출사고 대응 장비 개발 및 보유, 이중선체 유조선 의무화, 방재담당자 교육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체계 구축 및 행동메뉴얼 마련 등 유류오염 방지 및 방재 체제를 구성, 운영하고, 유류오염 벌금 및 피해보상 법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강홍순 처장=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등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며, 해상교통관리시스템(제도, 장비, 운영인력),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 안전한 피항지 확보, 재난시 대응 계획 및 훈련이 필요하다.

주요 해역별 오염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해양환경조사(생태, 지형 등) 및 민감지역을 선정

해 우선 방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방재활동과 관련해 방재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 자문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상과 관련해선 신속한 피해조사와 객관성 확보, 어업소득자료의 객관성 확보,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및 환경현황조사,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며, 환경영향조사 및 복원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조사 및 자연친화적 복원 방법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방재계획 및 지역방재 실행계획을 재평가하고 이를 재수립해야 하며, 방재능력을 권역별로 2만~3만톤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정종관 팀장=유처리제의 사용은 정책 의사결정 문제로 현장 방재책임자는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사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기름오염도가 심한 지역은 굴삭기로, 덜한 지역은 선별기로 기계적인 토양경작법을 활용해 제거할 수 있다. 염도가 높아 방제작업 과정에서 무스 형태로 가라앉은 것은 해저관찰 및 기름 상태를 평가해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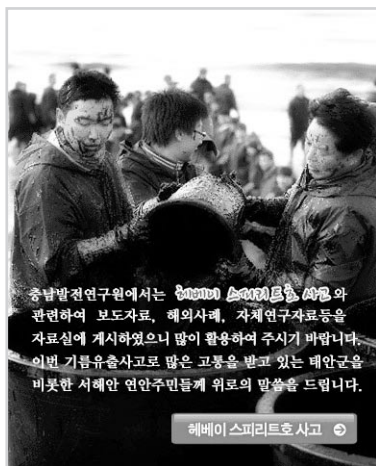
복지부의 역학조사결과 구토 증세 등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독성에서 비롯됐다는 잠정결론이 나온 만큼 방제작업이 장기화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필수다.

장기계획으로 환경생태 모니터링시 2008년부터 10년 간 사고 지역 주변 생태계의 변화, 토양 중 유류의 잔류 실태 등의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훼손된 해안사구의 복구, 잔류 유류 제거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하며, 기름유출로 해저퇴적 기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해저수생태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요구된다.

환경자원 가치와 장기적 생태복원에 소요되는 자원의 손실가치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산정이 중요하다. 특히 생태복원의 기준 시점, 복원 정도를 고려한 엄중하고도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7년 12월 25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충발연, 헤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 관련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난 12월 7일 발생한 헤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충발연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료실은 방제관련, 환경영향관련, 배상관련, 해외사례, 관련법률, 언론보도자료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 관련 전문가, 연구자,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충발연 관계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사고 관련 자료의 공유로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충발연에서도 이와 관련한 환경, 관광,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 [www.cdi.re.kr](http://www.cdi.re.kr)

## 충남발전연구원, 2007년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연구원 세미나 가져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2월 6일 오후 3시 대천 FUN BEACH호텔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충발연 이사장)를 비롯한 이사진과 충발연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이사회에 앞서 ' 시도연구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주제발표, 참석한 이사진과 연구원간의 토론 등 충발연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타 시도연구원과 비교해도 정책연구능력과 연구 성과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초 공주 신청사 이전으로 연구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 믿고,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앞으로 충남의 정책연구는 공무원,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코칭과 매니징 역할 등 이론과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2007년 하반기 공개경쟁 신규연구원 임용 및 임명장 수여

충남발전연구원은 2007년 하반기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4명의 신규연구원을 임용하고 12월 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서별 신규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임재영	윤정미	이관률	이인희
직급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서	산업경제연구팀	지역정책연구팀	지역정책연구팀	문화관광연구팀
연구분야	지역경제, 기술경제	GIS, 도시계획	지역개발, 지역경제	지리학

## 충발연, 대발연과 함께 추계 단합대회 개최

— 예산 덕숭산 등반대회 등 화합과 단결의 시간 가져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1월 9일 예산 덕숭산 등반대회 등 추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에는 연구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덕사 내의 문화재를 살펴보고 덕숭산 정상까지 등산하며, 양 연구원의

우의와 단결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충발연과 대발연은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을 계획하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며 올해처럼 연구원 단합대회도 매년 함께 치를 예정이다.

## 연말까지 충남 4개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 줄이어

— 충청연 주관 공동 워크숍 개최 등 갈등 예방과 해결에 힘 모아 —



충청남도가 상생과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권역별 포럼을 창립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포럼’)의 협력과 지원으로 이뤄지는 충남의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은 11월 2일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총 4개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권역별 포럼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권역(천안, 아산, 연기, 예산) ▲서남부권역(공주, 논산, 계룡, 금산) ▲중부권역(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해안권역(서산, 태안, 당진, 홍성)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권역별 포럼을 총괄하는 중심도시를 시·군 하나씩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조성국 청양 이장협의회



장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우리 지역의 갈등사안들을 논의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상임공동대표 권경득)과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의 공동주최 및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주관으로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의 창립총회와 연계하여 ‘전환기 지방정부 갈등이슈와 해법 찾기’란 주제로 행자부 관계자, 충남도 갈등관리담당관, 보령시·서천군·청양군·부여군 관계자, 학계,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의 2007년도 제3차 워크숍이 최병학 박사(포럼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의 ‘지자체 갈등관리의 의미와 방향’이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이선우 교수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써의 Policy Dialogue’, 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 최진하 단장의 ‘갈등이슈 지역에서 지역공동체간의 입장 차이’란 주제발표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 ‘포럼’과 충남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 포럼 운영 방안, 갈등관리 기법 교육,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등 충남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 실무 워크숍 가져

- 지자체 연구원의 발전과 전략,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회장 김용웅, 現 충남발전연구원장)가 주최한 실무 워크숍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행정자치부 안경원 사무관, 지자체 연구원 실무책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연구원의 발전전략”, 연구원 경쟁력 제고 및 합리적 평가 방안, “연구원 경영합리화와 복지 향상” 등의 주제로 1박 2일간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발전연구원 염도민 부원장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 및 주요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현재 전국 시·도에서 출연한 총 15개 지자체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연구원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연구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조직 개편, 전문적 연구를 위한 인력 확보와 자원의 활용,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도 연구 분과와 경영 분과로 나뉘 실무책임자간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는데, 일부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원이 열악한 근무 조건과 복지, 비합리적 조직 구성, 과도한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양질의 연구가 힘들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원의 발전과 정보 공유를 위해 실무워크숍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 연구원 신청사 상량식



지난 10월 12일 오후 4시, 공주시 금홍동 지방공무원교육원 내에 들어설 충남발전연구원 신축공사현장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발연 신청사 상량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수연수원 등 기관장 및 관계자도 참석하여 상량식을 축하

하며 신축공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독립 청사를 갖게 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2,710.76m<sup>2</sup>) 규모로 2008년 2월 준공과 함께 3월중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위해 지역역량 강화를

- 관 주도 탈피, 마을리더 육성 교육, 시민참여 활성화 시급 -



란 주제로 10월 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방안”이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도시지역은 양적성장과 중앙정부 의존적 발전 과정에 익숙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관련전문가·대학·지방연구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능동적·자발적 실천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 박재묵 교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주민과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은 만큼, 올바른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고유의 토착적 의제 발굴 ▲관주도의 추진기구 운영 탈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공동학습을 통한 전략 공유 ▲지역 공동체의 복원 또는 창출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마을 리더 육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는 “우리나라 농촌은 정책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할 뿐더러 기존 교육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충남지역 농촌지역 주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 리더 육성 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농촌지역주민의 97.8%와 담당 공무원의 88.9%가 마을리더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교육방식에 대해 농촌지역주민은 ‘주입식, 일방적인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45.3%, 스스로 고민하고 발표할 수 있는 ‘토론식, 참여식 교육’이었다는 평가는 28.3%에 불과하여 기존 교육방식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마을리더 역량배양이란 대상지역의 주체들의 공동실천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능동적인 실천 학습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는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면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 파트너십이 강조된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시민교육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은 물론 정체성 고취와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시재생, 지방이 더 절실하다

— 충청권지역혁신협의회, 충청권 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충청권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12월 7일 오후 1시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렸다.

대전·충남·충북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충청권의 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안건혁 교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주제 “도시재생의 세계적 추세”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토마스 베리(Tomas Barrie) 교수의 ‘미국 중소도시의 재생 전략과 사례’ 및 일본 토호쿠대학 마사테루 히노(Masateru Hino) 교수의 ‘일본지방도시의 최근 사례로 본 도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제2주제 “충청권의 도시재생” -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박사 등의 ‘대전·충남의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 및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 등의 ‘충북의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

비사업이란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안건혁 교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 결과는 다른 지방 도시에서의 인구와 산업의 유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자생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별 유행처럼 변진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지역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근 지역과의 불균형과 공동화를 부추기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결국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복합적 측면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도시에 적극 투입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토호쿠대학 마사테루 히노(Masateru Hino) 교수 역시 “일본의 지방도시도 더 이상 외부 자본의 유치와 경제성장 논리에 의존하는 지역 개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간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계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 참가

— 행정자치부, 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



11월 29일(목요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행정자치부 동영상 상영으로 식전행사가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토론회와 3세션으로 나뉘어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과와 전략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계호 경남 창녕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좌장 아래 이기원 강원 인제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발표로 현재까지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과 및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약 4시간에 걸쳐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지방분권·균형발전 평가”, “해외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사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 모색” 등을 주제로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아래 국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역혁신협의회 역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다.

##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충남기초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



11월 22일(목)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한 충남의 13개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웅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신정 충남기초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국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해”라는 주제 아래 특강을 시작으로, 최계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의 “지역혁신리더의 역할”, 김용승 충북 증평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지역 속으로 주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증평군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협의회 위원들의 역할과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하여 충남지역의 13개 기초지역혁신협의회가 약 4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각 협의회의 애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앞으로 협의회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 협약 체결

-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기업체대표 간의 협력체계 구축 -



11월 5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및 기업체대표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은 지역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교육사업, 직업교육 훈련 및 대학 교육의 특성화·지역밀착화 등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등의 사업을 충청남도,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RHRD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금번 R-Pack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3억 1천만 원이 투자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금번 협약식 행사는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문규 충청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30명이 참석하였으며,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 공동 회장인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총장을 비롯한 14개 대학 총·학장과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장, 삼성전자, 현대 오일뱅크 등 도내 대기업도 협약에 참여하여 '충남 R-Pack사업기관 교류협력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행·재정의 지원, 사업홍보 및 인적자원 수요·공급을 담당하고, 유관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충남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 내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자문 등 사업의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양대학교 등 14개 대학은 지역 인력의 산업 Mismatch 해결을 위한 전략적 인재육성 프로그램개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 내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 및 활용, 지역의 수요 및 공급여건을 고려한 특화산업지원형, 취업능력개발형,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삼성전자,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체는 본 사업을 후원·지원하고, 우수한 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지역사회 기업 및 단체 후원을 유도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사회 인적자원개발의 혁신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8년 3월, 충남발전연구원이 제2의 개원을 알립니다



**이전주소**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지방공무원교육원내

**문의** 충남발전연구원 총무팀

Tel. 042-820-1190



###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충남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기고 등  
참신한 내용과 알찬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열린충남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논단 : 한글파일, A4, 15~20페이지 내외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 기고 : 한글파일, A4, 2페이지 내외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 보내실 곳 | 전화 042-820-1125 팩스 042-820-1129 이메일 [cdipr@cdi.re.kr](mailto:cdipr@cdi.re.kr)

